

지역경제협력으로 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현황과 전망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부상한 아시아 지역주의(Asian regionalism)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위기 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통화금융협력 차원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채권 시장이니셔티브(ABMI), 실물 부문에서 수많은 양자 FTA들로 인해 아시아 지역주의는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내 분업구조의 특성과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지역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전망도 불확실하다. 경제지역주의의 초기 단계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심화는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9.24) 발표자료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지역금융통화협력의 현 단계
 - 가. CMIM과 AMRO
 - 나. ABMI와 CGIF
3. 지역경제통합의 현 단계
 - 가. 양자 FTA
 - 나. 다자 FTA
4.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와 평가
 - 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
 - 나. 해결 방향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현
 -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혔음. 한국의 경우 1998년 실질GDP 성장률은 -6.9%로서 사상 최악의 후퇴를 경험했으며, 실업률은 7.0%로 치솟았고, 30대 대기업 중 불과 17개만이 살아남았으며, 33개의 시중은행 중 17개 은행이 간판을 내렸음¹⁾
 - IMF의 구제금융으로 대표되는 가혹한 경제위기의 비용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의 경제발전모형에 대해 반성하고 전염효과(contagion effect)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며 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
 - 이후 동아시아 지역 내 여러 경제협력 이니셔티브가 발현되었는데, 이들은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적 지역주의의 성장으로 알려짐
-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와 발전 방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 발현에 대해 그 실제 유무와 관련된 많은 비판과 회의가 있어 옴. 경제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지역경제통합의 심화로 표현되었는데, 본 고에서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주로 동아시아 차원의 금융통화협력 제도와 FTA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 아울러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개방적 지역주의의 지향점을 점검하고자 함

2. 지역금융통화협력의 현 단계

가. CMIM과 AMRO

- 치앙마이이니셔티브의 다자화
 - 2000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는 위기 시 회원국들 간에 달러 유동성을 지급하여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한편, CMI는 기본적으로 양자적 협정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CMI를 다자화하여 지역안전망으로 확대발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음. 2008년 글로벌위기 시 CMI가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 또한 CMI의 개편을 앞당긴 배경 중 하나임
 - 2010년 3월 마침내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가 발효되어 역내국 간 통화스왑협정은 다자화

되었으며, 2014년 7월 CMIM의 총 규모가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확대되었고,²⁾ 위기 해결 기능에 중점을 둔 기존의 CMIM에 위기 예방 기능(CMIM-PL)을 도입³⁾하여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전 유동성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IMF 프로그램의 도입 없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어 프로그램의 독자성이 강화됨

- CMIM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가장 먼저 필요성이 인식되어 합의된 역내통화금융안전망 도구로서 다자화를 거치면서 지역안전망의 성격이 강화됨. 달러화로 지원하여 요청국의 자국통화로 바꿔주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위기국의 환율안정에 기여
- 그동안 5차례에 걸쳐 CMIM 모의실험을 진행하여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CMIM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음. 궁극적으로 CMIM이 지역금융안전망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향후 위기에 역내국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 AMRO의 국제기구화를 통한 역할 강화

- ‘아세안+3 거시경제감시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아세안+3 지역의 거시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한 동료평가(peer review) 기구임
- AMRO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전반적인 경제동향을 점검 및 분석하고 있음. AMRO는 회원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및 역내 경제감시보고서를 작성해 ASEAN+3 대표자 회의에 제출함
- 2011년 4월 AMRO는 싱가포르 소재 상법상 법인으로 출범하였으나, 현재 201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국제기구로의 법인격 전환에 맞추어 부소장급 직위를 3자리 신설하는 등 고위직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중장기 전략과 행동계획을 담은 비전을 마련하기로 합의함⁴⁾
- AMRO는 CMIM의 운용을 지원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조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이 지역의 고질적인 불간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정책조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CMIM은

역내통화금융안전망

도구로서 다자화를

거치면서 지역안전망

성격이 강화됨.

AMRO는 이 지역의

고질적 불간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정책조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ABMI와 CGIF

○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의 발전

-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기 예방을 위하여 자국 내 대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쌓아두고 있음. 이는 개별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방식으로 비용이 많이 듦.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 Asia Bond Markets Initiative)’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화폐로 발행하는 채권시장을 키워서 위기 시 외환

**한국의 경우를 보아도
아세안+6 국가들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과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셈**

(주로 달러)으로 발행한 자국 채권의 상환 부담을 덜고, 평상시 역내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됨

- ABMI가 시작된 것은 2003년부터였으나 천천히 진행되어 음.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역내 자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발행 활성화, 역내 신용보증 및 투자기구 신설, 결제기구 설립, 아시아채권의 표준 규범 마련 등 채권시장의 기반시설 구축임. 그중에서도 현재 역내 채권시장 표준화 노력의 일환인 ‘공통발행신고서’에 대한 초기 논의를 마무리하고, 시범 발행을 착수키로 하였음⁵⁾

○ CGIF의 활성화

- ‘역내신용보증기구(CGIF: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는 ABMI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로, 2010년 11월 아세안+3 국가들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해 창설됨. CGIF는 역내 회원국들이 자국 화폐로 발행한 채권을 보증함으로써 지역의 투자등급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데 도움을 줌. 채권상환의 만기불일치를 줄이고 외부 충격에 더 강하게 하여 역내 금융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⁶⁾
- 7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CGIF는 그동안 보증업무가 확대되어 왔고 프로젝트채권을 비롯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역내 채권발행에 대해 더 많은 신용보증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⁷⁾

3. 지역경제통합의 현 단계

가. 양자 FTA

○ 양자 FTA의 양적 확대

- 지난 10여 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아세안+6)에서 양자 FTA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음.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세안, 싱가포르, 호주, 인도와의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 이외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개별 FTA 협상을 검토 중에 있음. 아세안+6 국가들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과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셈
- 중국의 경우도 아세안 이외에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FTA가 타결되었으며,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등과 FTA 체결 또는 협상 중임. 인도와의 FTA 또한 고려하고 있음
- 일본도 아세안, 인도,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FTA도 검토하고 있음

○ 활용률의 상대적 저조와 스파게티볼 효과

- 지난 15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자 FTA의 체결 및 발효는 크게 성행하였으며, 역내 FTA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6 국가들 간 FTA는 수준이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예컨대 한중일 3국이 아세안과 체결한 FTA는 개방도가 낮아서 3국은 아세안 개별국가들과의 FTA를 또다시 별도로 체결하고 있으며, 인도와의 FTA는 어느 경우든지 낮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음
- 다른 지역과의 FTA에 비해 아세안+6 국가 간의 FTA의 활용률이 떨어짐. 예컨대 한국의 다른 지역과의 FTA는 활용률이 80% 내외를 보이고 있으나,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15년 상반기 40.3%, 한-인도 CEPA의 경우 62.1%에 머물고 있음⁹⁾
- 이는 낮은 관세철폐율과 복잡한 원산지 증명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특혜무역협정의 혜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때문임

나. 다자 FTA

○ 복수국 간 또는 메가 FTA의 발현 배경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낮은 성장률, 무역의 성장 및 소득 기여도 감소와 정체되는 교역량에서 양자 FTA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회의론이 더욱 힘을 얻으면서 새로운 돌파구 모색 시도
- 과거 WTO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했던 메가 FTA가 시도되기 시작함.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EU-일본 FTA와 같은 거대경제권 간 양자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으로 대변되는 복수국 간 지역 FTA가 최근 5년간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부상

○ TPP

- 미국을 비롯한 12개 아태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인 TPP는 2015년 7월 말 TPP 각료협상의 무산으로 한 때 협상조기타결에 회의론이 있었으나, 10월 5일 애틀랜타각료회의에서 전격 타결됨으로써 전 세계 GDP의 40%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성사됨
- 당초 3대 핵심쟁점(유제품, 지적재산권, 자동차)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의 어려움이 있었음. 유제품의 경우 뉴질랜드 vs. 캐나다, 미국, 일본, 지적재산권(생물의약품 자료독점권)의 경우 미국 vs. 기타 국가들, 자동차

*다른 지역과의
FTA에 비해
아세안+6 간
FTA 활용률이 낮음.
낮은 관세철폐율 및
원산지 증명에서의
복잡성으로 기업들이
특혜무역협정 혜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때문임.
최근에는 복수국 간
지역 FTA가 두드러진
현상임*

한국은 일본 및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10개국과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음. 그러나 TPP의 추가 개방 여력 및 통합원산지규정 등은 매력적임. 반면,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이 부담으로 작용함. TPP는 그 속성상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대립하고 있으며 아세안 중심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 RCEP의 협상 속도는 느린 편임. 개도국에 대한 배려와 인도의 참여로 최종 타결될 개방의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역내가치비율: Regional Value Content: RVC)의 경우 일본 vs. NAFTA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음⁹⁾

- 한국은 일본 및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10개국과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나, TPP가 갖고 있는 추가 개방 여력 및 통합원산지규정 등이 매력적임. 반면에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이 부담으로 작용함
- TPP는 미국 주도의 지역 FTA로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해 올. TPP는 그 속성상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 중심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는 TPP 가입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대해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그리고 한국이 TPP 추가 가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 TPP의 파급효과와 역외 관심국의 참여 시기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2012년 11월 출범하여 현재 부산에서 10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아세안+6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 FTA
- 당초 TPP에 대항하여 중국이 큰 관심을 가졌으나 일본과의 패권 다툼, 아세안의 적극적 관심으로 현재 아세안이 협상의 중심이 되어 끌고 가고 있음¹⁰⁾
- 10차 협상에서 리퀘스트앤드오퍼리스트(Request-Offer List: R/O)가 교환될 것으로 보여 협상의 속도는 느린 편임. 개도국에 대한 배려와 인도의 참여로 최종 타결될 개방의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RCEP 국가 간 통합원산지규정이 마련된다면 FTA 활용도는 커질 것임
- RCEP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적합한 도구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으나 수준 높고 영향력 있는 FTA로서의 위상을 갖기 어려움

○ 한중일 FTA

- 2013년 3월 1차 협상이 시작된 한중일 FTA는 동북아시아 대표 국가들 간의 FTA라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음. 현재 8차 실무협상이 끝난 이 FTA는 한중 FTA와 TPP 추진 과정에서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기존의 한중 FTA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한국의 조정자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¹¹⁾
- 한중일 FTA는 향후 북한, 극동러시아/연해주 개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일대일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과 결부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

4.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와 평가

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

- 약한 지역적 정체성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이념적, 지리적으로 분단되어 있었음. 일본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된 경제권은 미국, 서유럽 등 동아시아 역외시장과의 급속한 시장통합으로 지역 내 상호 공존공영의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없었음
 - 197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이 있었으나, 유럽이 1990년대 이후 공산권의 몰락으로 인해 겪은 시장통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런 가운데 냉전으로 인해 전후 미해결로 남아 있던 과거사, 영토문제가 부각되면서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시킬 여력이 부족한 상황
 - 제도적 발전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발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의 정체성 발현, APEC, 한중일 협력사무소 설립 등이 있었으나,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본격화시킬 수 있는 내부 역량과 외부 지원이 부재
- 금융통화협력 확대를 통한 지역주의의 발현
 - 역내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 국가들의 자각에서 비롯되었음. 한편, 일본에 의한 AMF 시도가 역내 국가들의 불신과 역외국들의 방해로 좌절되면서 1990년대 상황에서 역내 금융통화협력은 시기상조였음이 드러남
 - 이후 CMIM, AMRO, ADBI, CGIF 등으로 대별되는 지역금융통화협력의 발전은 비록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역내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역내 경제의 상호 신뢰 구축과 번영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는 금융통화현상의 특수성과 전염효과, 국제결제통화의 역내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현 단계에서는 확실한 지역 금융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
 - 또한, 역내 경제순환 동조화가 강화됨에 따라 위기 시 역내국 간 상호 부조 효과의 한계, 이 지역 국가들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대응하는 막대한 역외 자본투자의 필요성으로 인해 역내 채권시장 육성의 불확실한 전망 등 중장기적 발전 전망에 대한 회의가 있음

지역금융통화협력의 발전은 비록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역내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역내 경제의 상호 신뢰 구축과 번영을 위한 단초를 제공

**TPP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시험하는
시험대의 역할을 함.
동아시아는 역내에서
생산 및 소비하는
자기완결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함.
다자적 통화스왑
확대,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자국 화폐로 발행하는
채권시장 활성화,
통화의 국제화가 핵심**

- 지역경제통합의 한계와 도전
 -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FTA의 확산에 따라 가장 활발하게 지역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제 내부를 들여다 보면 스파게티볼 효과로 말미암아 양자 FTA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TPP, RCEP, 한중일 FTA 등 복수국 간 지역 FTA는 TPP를 제외하고는 아직 큰 진전이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TPP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시험하는 시험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
 - RCEP이나 한중일 FTA의 활성화는 지역 내 통합원산지규정의 발전이 핵심적인 사안인 바,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양자 FTA도 다자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지역경제통합이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지역공급망 구축에 따른 공급기지화의 역할이 강화되어 왔었고, 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기완결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함
 - 궁극적으로 최종재 시장을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는 한, 양자 FTA 또는 지역 FTA의 발달은 안정적이고 외부 충격에 강한 지역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키기 어려움¹²⁾
- 제도 vs. 협력
 - 결국 금융통화 부문은 아직 불충분하지만 제도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반면, 실질적인 협력의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상황임. 실물 부문의 통합은 제도에 따른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TPP 등 심각한 외부적 도전이 있으며, 향후 협력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음

나. 해결 방향

- 지역적 정체성의 확립
 - 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적 제도 구축이 필요함¹³⁾
- 금융통화협력의 강화와 화폐의 국제화
 -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존에 발전되어 온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자적 통화스왑의 확대,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자국 화폐로 발행하는 채권시장 활성화, 그리고 통화의 국제화가 핵심적인 사항임. 통화의 국제화는 국제결제시장의 설립, 무역거래에서 지역 화폐 사용, 나아가 지역 화폐 간 환율조정에 커니즘 설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물시장 통합: FTA의 다자화, 서비스산업 개방
 - 현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교역이 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는 점, 수출 부문이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가구소득 감소 및 불평등의 확대로 내수가 늘지 않는다는 것 등임
 - 첫 번째 문제점은 수입수요가 늘지 않는 수입국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양자적 FTA의 다자화를 통하여 해결해야 함.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을 수정하여 제3국의 참여를 더 용이하게 해야 함. 예컨대 역외가공의 확대, 최소허용기준 활용, 자기검증 확대, 원산지 누적방식 변경 등이 있음¹⁴⁾
 - 두 번째 문제는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치사슬의 일부만이 국내에 남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축적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음. 가치사슬 확대에 따른 수출의 성장기여도 감소는 고부가가치 공정의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함
 - 세 번째 문제점은 현재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의 확대에 따라 자본소득분배율이 노동소득분배율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서 기인하는 부분과 노동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혼재되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유동화를 통한 소비여력 확보, 서비스산업의 국제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비 확대, 역내 단일시장 형성 가속화가 필요함

5. 맺는 말

- 경제적 지역주의의 부상과 한계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해짐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부상함. 이후 화폐금융 및 실물경제 부문에서 상당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 왔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갈등의 고조, 지역적 정체성의 미확립 등으로 원활한 협력기제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금융통화 부문에서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협력을 이뤄낼 만한 독립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실물경제통합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질적인 수준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그 성과가 지체되고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제도 구축 및 협력 실현은 이 지역의 번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물경제통합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질적인 수준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필수적인 토대가 됨

- 따라서 실물 및 화폐금융 부문의 지역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고 이 과정에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역내 정부 간 협력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TPP가 타결된 상황에서 RCEP 및 한중일 FTA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역내 화폐의 국제화를 위한 제도적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북한 및 극동 러시아 개발, 일대일로와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접목 및 활용을 통한 동북아 낙후지역 개발 등 아직도 성장여력이 풍부한 지역을 동력으로 삼아 이 지역의 공동 번영을 꾀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임

주석

* 초고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제주평화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아 있는 오류는 필자의 몫임. 본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식입장과는 무관함.

- 1) 『한국경제60년사』(2010).
- 2) 우리나라의 부담액은 384억 달러로 16%인데, 위기 시 부담액만큼인 384억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인출배수가 1임. 이 수혜한도는 국가마다 달라서,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인 768억 달러를 부담하지만 인출배수는 0.5(홍콩은 2.5)임에 반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큰 아세안 국가들은 인출배수가 2.5, 브루나이와 CLMV는 5로 책정되어 취약한 소국일수록 부담액 대비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기획재정부, 2014).
- 3) 예방적 긴급유동성 지원제도(CMIM-Precautionary Line)는 대외 및 금융 부문 안정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통화정책의 신뢰성, 정보 적합성이라는 5개 항목별 사전적격요건이 있는데, 이를 각국별로 과거 실적과 비교하여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시계열 분석방식에 더하여 경제모형을 통해 산출된 국별 이상적인 기준에 비교하여 현재를 평가하는 구조적 분석방식을 통해 보완하기로 함(기획재정부, 2015a).
- 4) 기획재정부(2015c).
- 5) 기획재정부(2015a), 동아시아의 경우, 과거 채권시장의 미발달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유럽결제동맹을 만들고 거시경제정책을 공조한 1950년대 서유럽보다 통화금융협력 수준이 낮음.
- 6) <http://www.cgif-abmi.org/>
- 7) 기획재정부(2015b), 제18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 8) 관세청(2015), FTA 특혜무역활용통계.
- 9) 유제품의 경우 뉴질랜드의 전방위 개방 압력에 대하여 선거를 앞둔 캐나다가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미국은 12년의 생물의약품 자료독점권 보호 기간을 요구하다가 8년으로 양보하였음. 일본은 자동차 부문에서 TPP 역외국인 태국과의 분업구조로 인하여 역내누적비율을 가능한 한 낮춰 32.5%를 보장받았음.
- 10) RCEP 협상에서 아세안 FTA 파트너(AFP: ASEAN FTA Partner)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비아세안 6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AFP Facilitator는 이 6개국의 의견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의미함. 이는 협상이 아세안 위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줌(강민지, 2015).
- 11) 강민지(2015).
- 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Kim(2012) 참고.
- 13) Kim(2012).
- 14) Kim(2015).

참고문헌

- 강민지. 2015.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5(25). 2015.09.17.
- 관세청. 2015. “FTA 특혜무역 활용통계.” 공지사항, 2015.08.17. http://www.customs.go.kr/kcshome/ftaportalkor/FtabbsDetail.do?bbsId=BBSMSTR_1550&layoutMenuNo=30712¤tPageNo=1&searchKeyword=&searchCondition=&nttId=571
- 기획재정부. 2014. “CMIM 총 규모 2400억 달러로 두 배 확대.” 보도자료, 2014.07.17.
- _____. 2015a. “ASEAN+3 재무장관, 사전적 위기예방 위한 협력 강화하기로.” 보도자료, 2015.05.03.
- _____. 2015b. “제18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2015.05.03.
- _____. 2015c. “정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연례협의.” 보도자료, 2015.07.05.
-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 60년사』 I(경제일반), II(산업).
- KIM, Heungchong. 2012.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Lessons from Europe, Korea's Economy*, Vol.28. Korea Economic Institute, 2012.11.
- _____. 2015. “Multilateralization of Bilaterals: A Modification of ROO in the Korea-EU FTA.” mimeo, KIEP.
- Asia Development Bank. <http://www.cgif-abmi.org/>

❖ 저자 약력

■ 김흥종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부원장, 연구조정실장.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으로,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및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한국EU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석·박사 졸업 후 영국 Oxford대학교에서 MPhil in Economics 취득. 미국 UC Berkeley Fulbright 방문학자, Honorary member of Christ Church, Oxford, 외교부 한-EU FTA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정부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음.

기획 및 감수: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편집: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